

### 우리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

#### ■ 우리사회 시스템 평가 총괄 분석

- \_ 국민들, 우리사회 시스템에 긍정적인 편
- \_ 계층별 폐지/유지 엇갈리는 항목, 총 14개
- \_ 사회시스템 평가 총점, 국민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

#### ■ 계층별 평가 총점 분석

- \_ 성/연령별 : 20대 가장 높고, 40대 가장 낮아
- \_ 지역별, 직업별 : 호남과 학생층 점수 가장 높아
- \_ 이념별, 이익층시별 : 점수 차이 크지 않아

#### ■ 폐지, 유지 엇갈리는 주요 항목 분석

- \_ 주52시간 근무제 : 자영업자만 ‘폐지’ 우세
- \_ 대학 수시입학제도 : 2040 유지 vs 5060 폐지
- \_ 병역 특례제도 : 계층내에서도 의견 대립 팽팽
- \_ 여성가족부 : 남자 2030세대 ‘폐지’ 의견 압도적
- \_ 대통령 사면권 : 거의 전 계층에서 ‘폐지’ 우세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7월 1일(금) ~ 7월 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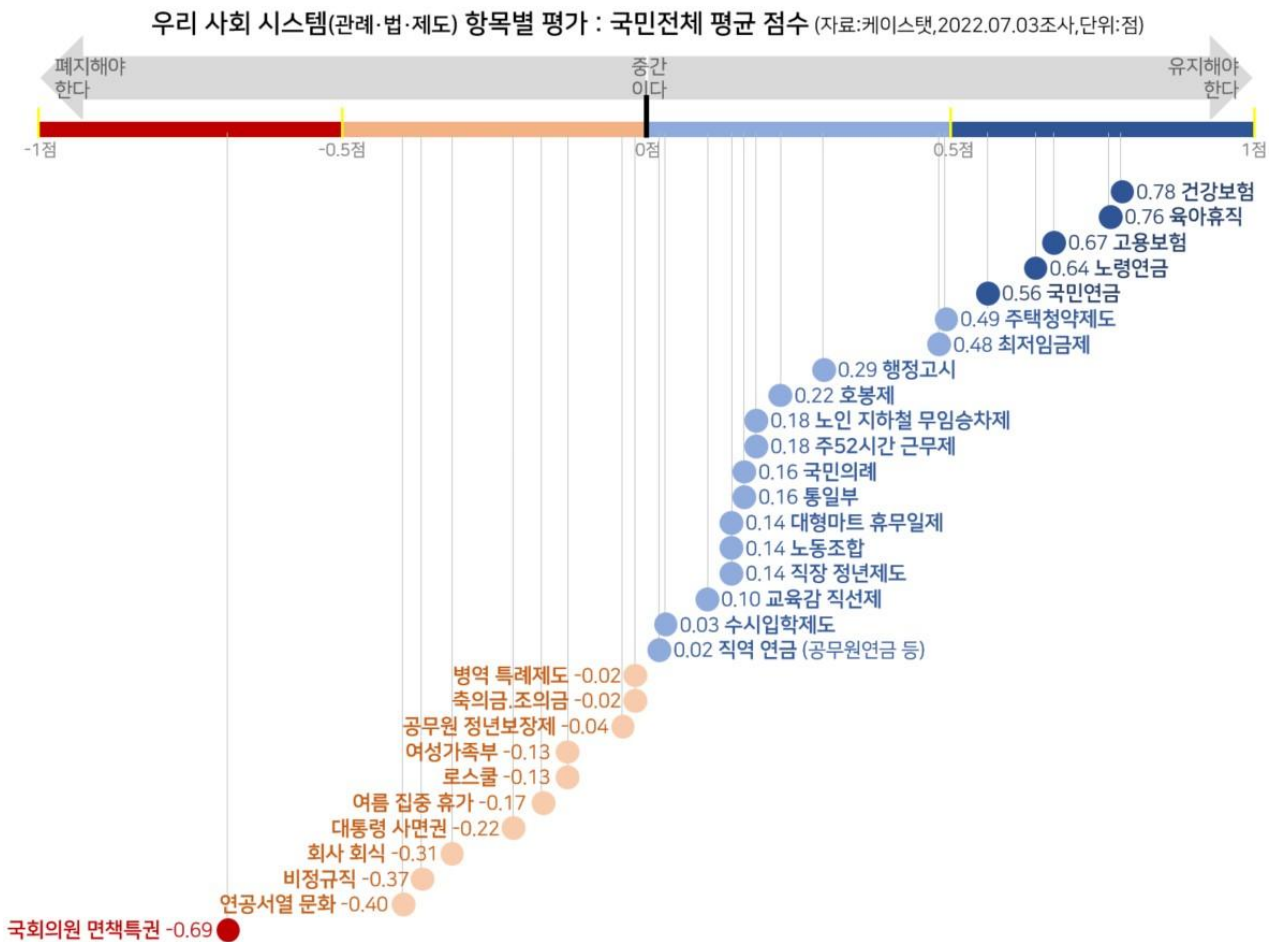
##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우리사회 시스템 평가 총괄 분석

### □ 국민들, 우리사회 시스템에 긍정적인 편

- 우리사회의 관례·법·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총 30개 항목 중 ‘유지해야 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은 관례·법·제도는 모두 19개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부정평가는 모두 11개임
  -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건강보험’(0.78점)이고, 다음은 ‘육아휴직’(0.76점), ‘고용보험’(0.67점), ‘노령연금’(0.64점) 순임
  -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0.69점)이고, 다음은 ‘연공서열 문화’(-0.40점), ‘비정규직’(-0.37점), ‘회사 회식’(-0.31점)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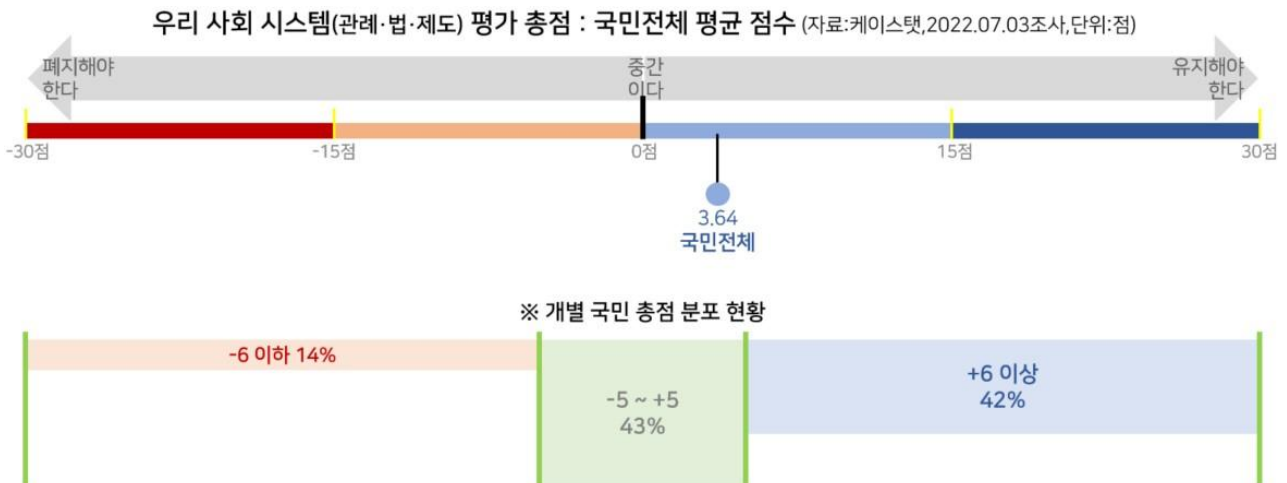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시스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지금의 한국사회 시스템은 역대 정부를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역사적 산물임
  - : 다만,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케이스탯에서 선정·조사한 30개 항목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30개 항목에 대한 기본 조사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54호 『우리사회 관례·법·제도에 대한 국민생각』 참고



## □ 사회시스템 평가 총점, 국민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

- 총 30개의 우리사회 시스템(관례·법·제도) 평가 점수를 총점으로 합산한 결과, 국민전체 평균점수는 '유지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3.64점으로 나타남
- 사회시스템 평가 총점과 국민전체 평균 점수를 구한 과정은 아래와 같음
  - 총 30개 문항에 대한 보기는 동일함('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중간이다',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등 5개)
  - 각 문항별 응답에 대한 점수화 처리 역시 다음처럼 동일함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 -1점 / '중간이다' : 0점 /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1점
  - 각 응답자별 총점은 개별 응답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며, 최저 점수는 -30점이고, 최고 점수는 +30점이 됨
  - 이러한 개별 응답자 총점의 국민전체 평균은 3.64점임
- 개별 국민의 총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중간 점수대인 -5 ~ +5 사이에 43%가 위치해 있고, 다음으로 +6 이상 42%, -6 미만 14% 순으로 분포함



### Kstat Point

- ☑ 우리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전체 평균점수는 3.64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지만, 긍정의 강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님  
: 총점이 -30점에서 +30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3.64점은 중간에서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함
- ☑ 지금의 관례·법·제도 중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다수지만, 폐지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지해야 하는 관례·법·제도는 19개이고, 폐지해야 하는 것은 11개임
- ☑ 국민여론만 놓고 볼 때 지금의 우리사회 시스템에 만족하는 편이지만, 폐지해야 하는 관례·법·제도를 정비할 때 사회시스템에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계층별 평가 총점 분석

### 성/연령별 : 20대 가장 높고, 40대 가장 낮아

- 우리사회 시스템(관례·법·제도)에 대한 총점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연령이 0점 보다 높은 긍정적 점수를 기록함
- 세부적으로는 남녀 20대의 경우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다른 성/연령은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음
  - 특히 여자 20대는 8.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40대가 2.29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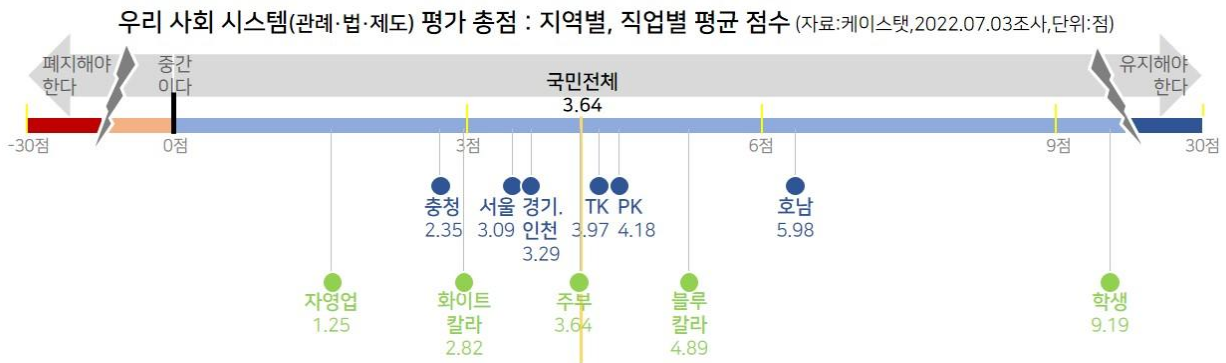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사회 시스템에 대해 20대는 만족하지만, 다른 세대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임
  - :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는 현행 사회 시스템을 만든 당사자이기에 이를 옹호하고, 젊은 세대는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기에 반발한다고 말해짐
  - :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옴
- ☑ 이는 세대 간 인식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공정'이라는 아젠다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의 단초를 찾아 볼 수 있음
  - : 박근혜 정부 말미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서 '공정'이 촉발되었지만 이때는 거의 모든 국민이 '공정'을 요구함에 따라 세대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음
  - : 세대 간 차이가 부각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로, 당시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는데 이때 20대의 62%가 반대했으며(자료, 한국갤럽), 그 이유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음
  - :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파문을 계기로 20대를 중심으로 '불공정' 아젠다가 확산되었고,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발표 후 20대 반발로 무산됨)를 통해 사회적 아젠다로 정착됨
  - : 이러한 과정에서 40대는 '통일', '검찰개혁', '비정규직 폐지' 등으로 20대와 다른 의견을 피력함
- ☑ 즉, 40대는 우리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는데 비해, 20대는 시스템 '운영의 문제'에 주목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40대는 한국사회 문제 원인을 시스템 '구조'에서 찾고, 해결도 구조적 방법을 추구하지만 (법·제도 중심 사회개혁)
  - : 20대는 시스템 '운영'에서 찾고, 해결 역시 '운영'에서 찾기 때문에 판단됨 (공정 중심 사회운영)
  - : 또한 40대 입장에 가까운 세대는 50대이고, 20대 입장에 가까운 세대는 30대와 60대임
- ☑ 성/연령별로 우리사회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이 뚜렷이 다르고, 이점이 세대차이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 지역별, 직업별 : 호남과 학생층 점수 가장 높아

- 지역별 총점을 살펴보면, 호남이 5.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충청이 2.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지역은 호남을 비롯해 PK, TK임
  -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지역은 충청, 서울, 경기, 인천 등임
- 직업별로는 학생이 9.19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가 1.25점으로 가장 낮음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직업은 학생, 블루칼라 등임
  - 이에 비해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직업은 자영업, 화이트칼라 등임



### Kstat Point

- ☑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지역적으로 볼 때, 호남과 PK, TK는 국민전체 보다 높은 긍정평가 점수를 기록함
  - : 정치적으로는 호남과 TK가 대립하고 있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진영으로 나뉜 후 모든 정치 이슈에 대해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이른바 '정치과잉'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가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러한 '정치과잉' 현상을 정치권이 앞장서 조장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가 지역을 약용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됨
- ☑ 직업적으로는 학생이 가장 긍정적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앞서 20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제를 시스템 구조가 아닌 '운영'에서 찾기 때문으로 보임
- ☑ 자영업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데는 코로나19 충격에 온전히 노출된 경험 때문으로 분석됨
  - : 즉, 코로나19 유행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가가 시행했지만 이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아닌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 이러한 경험이 사회시스템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 □ 이념별, 이익중시별 : 점수 차이 크지 않아

- 우리사회 시스템(관례·법·제도)에 대한 총점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진보층(4.10점)과 중도층(3.42점)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고, 특히 진보층과 보수층 간의 점수차이는 매우 적음
- 이익중시별로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이익 중시층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중간층과의 간극이나 개인이익 중시층과의 간극은 매우 적음



### Kstat Point

- ☑ 우리사회의 각종 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 차이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음
  - : 앞서 지역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영대결 양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른바 ‘정치과잉’ 현상 때문으로 보임
  - : 이렇듯 우리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는데도 정치 이슈에 따라 진영으로 갈리고 대립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소모적이라는 지적임
- ☑ 또한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념적 차이보다 세대적 차이가 크다는 점이 매우 뚜렷함
  - : 현상적으로는 ‘정치과잉’으로 인해 이념적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세대 간 차이가 중요함
  - : 즉, 언론 등에서는 보수·진보 진영이 구축되어 있고, 어느 세대가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를 따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대차이가 보수·진보 진영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측면에서 남자 20대는 일시적인 ‘보수화 경향’이 아니라, 스스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임
  - : 또한 여자 20대도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성평등 이슈로 인해 머뭇거리거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 다만, 20대의 보수화가 곧바로 20대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로 치환되는 것은 아님
  - :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른바 ‘기득권 정당’, ‘꼰대정당’ 이미지가 많이 탈색되었지만, 여전히 20대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 한편, 민주당은 20대 보수화(넓게는 20대와 동조화되어 있는 30대까지 포함)에 대한 대응에 있어 여전히 진영대결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임
  - : 20대는 일시적인 보수화가 아닌 스스로 보수화되었고, 이는 불충분한 사회시스템이 강제한 측면이 강함
  - : 즉, 20대는 빈부격차와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보수화를 택했다는 것임
  - : 민주당이 20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20대의 보수적 가치(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수용하거나, 빈부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진영중심 정치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어 쉽지 않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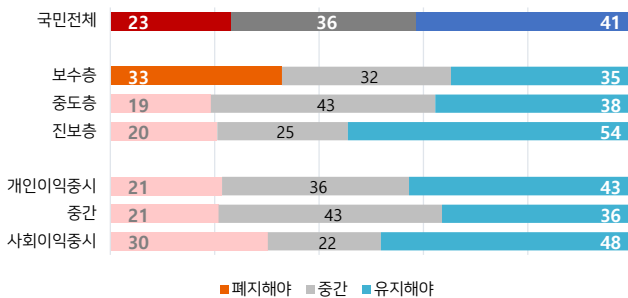


## ▶ 폐지, 유지 엇갈리는 주요 항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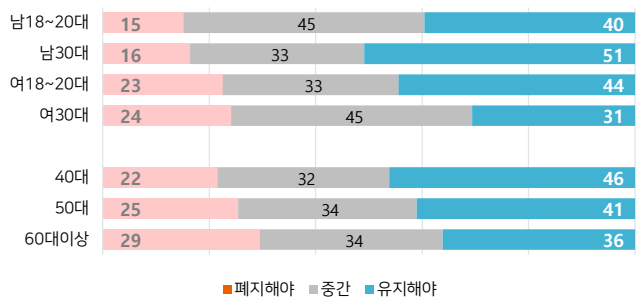
### □ 주52시간 근무제 : 자영업자만 '폐지' 우세

- '주52시간 근무제'는 현 정부가 개편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유지' 의견이 우세함
  - 국민 전체적으로 '유지' 의견은 41%이고, '중간' 36%, '폐지' 23%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다라도 거의 모든 계층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남자 30대 △호남 △학생 등임
- '폐지'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자영업자에 그치고 있음
- 한편,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보수층으로 '폐지' 33%, '유지' 3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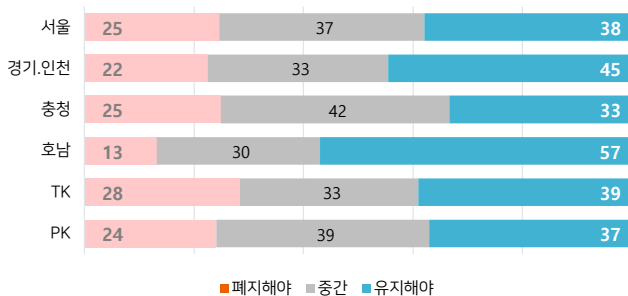
'주52시간 근무제' 평가 : 국민전체, 이념별, 이력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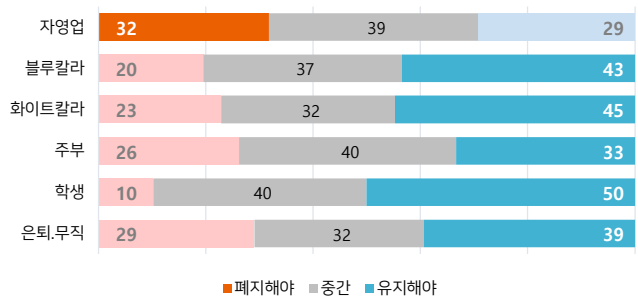
'주52시간 근무제'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주52시간 근무제'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주52시간 근무제'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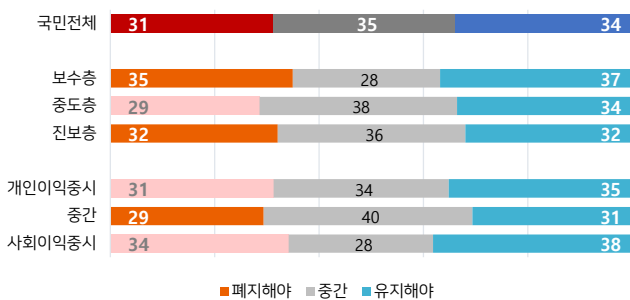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방향을 발표함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총 근로시간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는 '월 단위 총량 관리제'를 제시함
- ☑ 그러나 발표 다음 날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최종 개편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백지화함
- ☑ 근로시간 개편은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첨예한 이슈인데, 국민여론만 놓고 보면 '유지' 의견이 우세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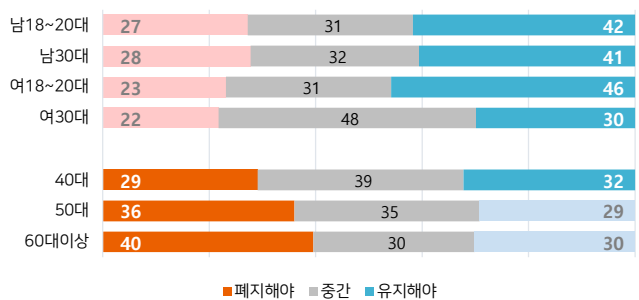
## □ 대학 수시입학제도 : 2030 유지 vs 5060 폐지

- ‘대학 수시입학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은 ‘폐지’와 ‘유지’ 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팽팽한 양상임
  - 국민 전체적으로 ‘폐지’ 31% ‘유지’ 34%로 팽팽하고, ‘중간’은 35%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폐지’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 ‘폐지’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5060세대 △충청 △자영업,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 ‘유지’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중도층 △개인이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40대 △서울, 호남, TK △블루칼라, 학생 등임
-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보수층, 진보층 △이익중시 중간층 △경기.인천, PK △화이트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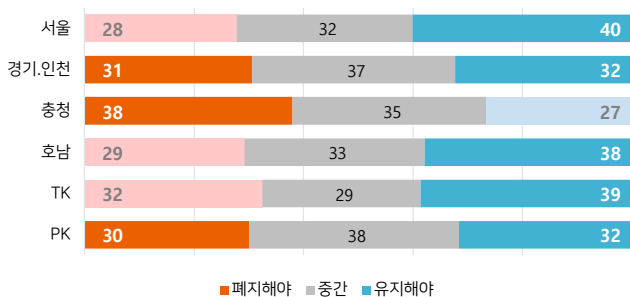
‘대학 수시입학제도’ 평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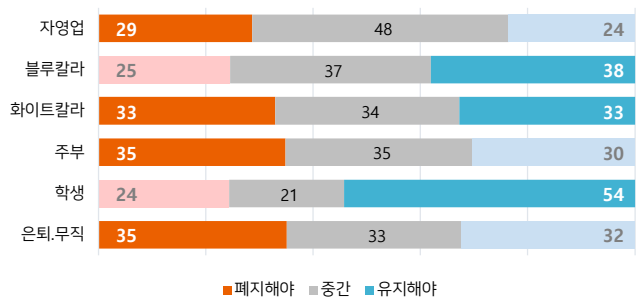
‘대학 수시입학제도’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대학 수시입학제도’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대학 수시입학제도’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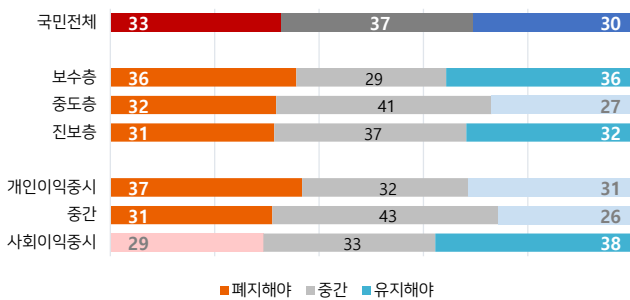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그동안 ‘대학 수시입학제도’는 특권층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국민여론도 ‘폐지’와 ‘유지’가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임
  - : 당초 수시입학제도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평가해 입학 결정하겠다는 취지였음
  - : 그러나 취지와 달리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각종 스펙 쌓기를 통해 수시입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으며, 현재는 수시입학 규모가 축소된 상황임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 ‘유지’ 의견이 우세하고, 5060세대는 ‘폐지’ 의견이 우세함
  - : 이러한 차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에 대한 세대 간 관점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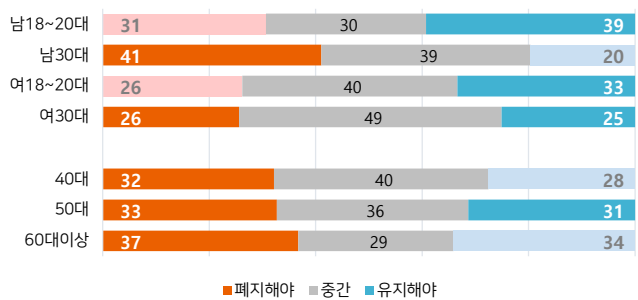
## □ 병역 특례제도 : 계층내에서도 의견 대립 팽팽

- 최근 BTS 그룹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재차 논란이 된 ‘병역 특례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폐지’와 ‘유지’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음
  - 국민전체적으로 ‘폐지’ 33%, ‘유지’ 30%로 팽팽하고, ‘중간’은 37%로 조사됨
- 계층별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계층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매우 쟁점이 되고 있는 제도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계층내 의견 차이는 5%p 이내임
- 먼저 ‘폐지’, ‘유지’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보수층, 진보층 △50대 △경기.인천 △주부, 학생 등임
- ‘폐지’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서울, 충청 △화이트칼라 등임
- ‘유지’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사회이억 중시층 △남녀 18~20대 △TK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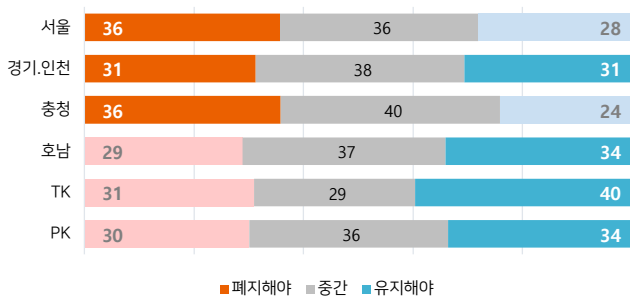
'병역 특례제도' 평가 : 국민전체, 이념별, 이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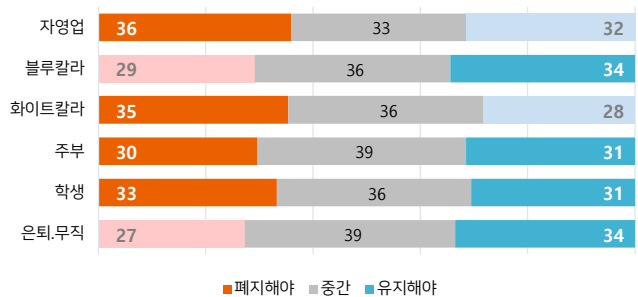
'병역 특례제도'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병역 특례제도'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병역 특례제도'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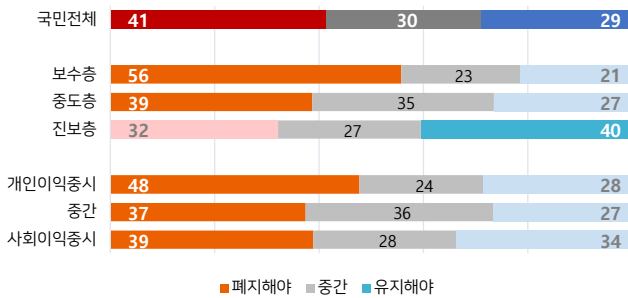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병역이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병역 특례제도’는 그 자체로 특혜를 주는 제도임
  - : 이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반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왔음
  - : 여론면에서도 국민전체는 물론 계층내에서도 ‘폐지’, ‘유지’ 의견이 팽팽해, 30개 법·제도 중 가장 쟁점적인 제도임
- ☑ 성/연령별 응답에서 주목되는 점은 남녀 20대 의견으로 이들은 ‘유지’ 의견이 우세함
  - : 남녀 20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은 세대로, ‘애국심 고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됨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52호 『애국심과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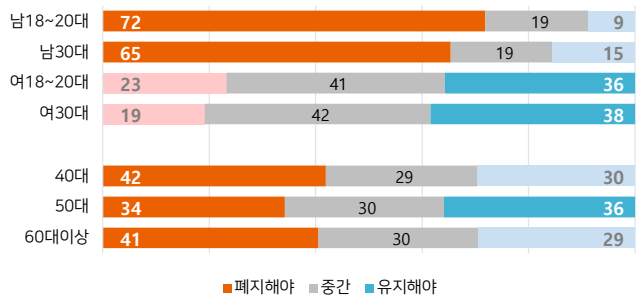
## □ 여성가족부 : 남자 2030세대 '폐지' 의견 압도적

-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여론은 '폐지'의견이 41%로 우세함
  - '유지' 의견은 29%이고, '중간'은 30%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폐지'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개인 이익 중시층 △남자 2030세대 △충청, PK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유지'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여자 2030세대 △호남 △주부 등에 그침
- 한편,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50대로 격차는 2%p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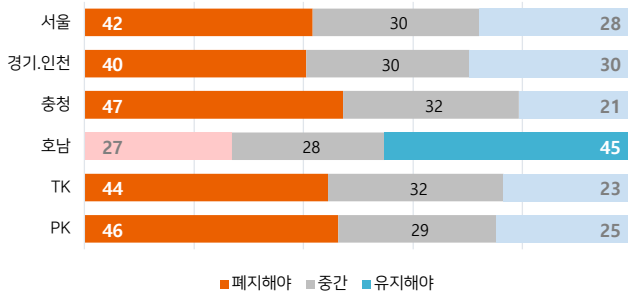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평가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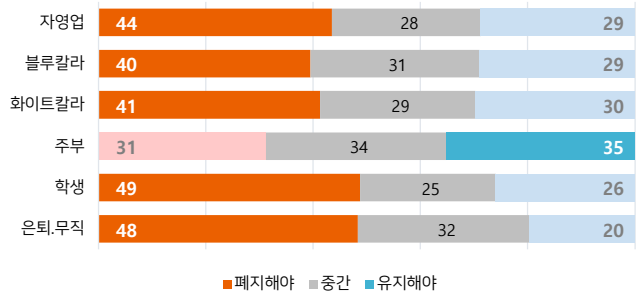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여성가족부'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여성가족부'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7.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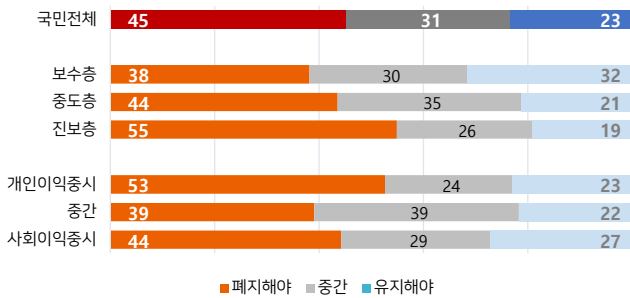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할 예정이고, 조만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폐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 정치쟁점화 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여론은 '폐지' 여론이 우세하고, 특히 남자 2030세대의 폐지 의견이 매우 높음 (각각 72%, 65%)
  - : 이에 비해 여자 2030세대는 '유지'의견이 우세하지만, 강도면에서 약한 모습임(각각 36%, 38%)
  - : 향후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할 경우 국민여론은 윤석열 정부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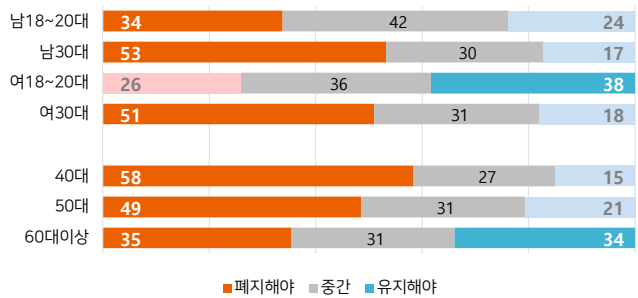
## □ 대통령 사면권 : 거의 전 계층에서 '폐지' 우세

-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국민여론은 '폐지'의견이 45%로 우세하고, '유지' 의견은 23%에 그침
  - '중간이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폐지'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개인 이익 중시층 △남자 30대 △여자 30대 △4050세대 △충청, 호남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등임
- '유지'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18~20대 △학생 등에 그침
- 한편,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60대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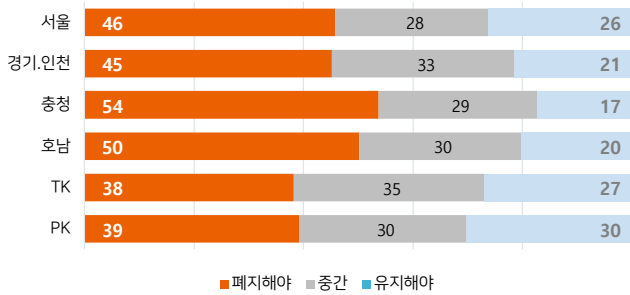
'대통령 사면권' 평가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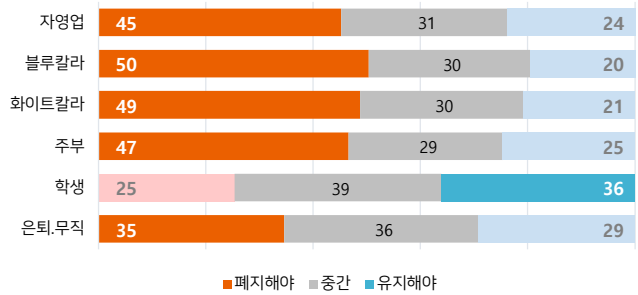
'대통령 사면권'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대통령 사면권'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대통령 사면권'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7.03조사, 단위:%)



### Kstat Point

- ☑ '대통령 사면권'은 법 체계를 초월하는 '특권'으로 대표적인 특혜 제도로 꼽히고 있음
  - : 법에 의해 심판받을 특정인이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특권임
  - : 물론 대통령 사면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에도 존재함
  - :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이 시행될 때마다 '폐지', '유지' 의견이 대립해 왔으며, 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어 왔음
- ☑ 이번 조사에 나타난 국민여론은 '대통령 사면권'에 부정적이기에,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됨
  - : 특히 보수층에서도 '폐지' 의견이 우세해, 광복절 특사가 국정지지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 특사 단행 여부와 인물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56, 5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6호와 57호는

여름 휴가 일정 등으로 각각 8월 18일(목요일), 9월 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8월 사회지표는 8월 2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